

건설동향브리핑

제511호 (2015. 5. 18)

■ 기획 · 특집 : 건설CEO 100인 설문조사

- 건설CEO 32.8%, 입 · 낙찰 및 적정공사비 정책 미흡
- 건설CEO 41.8%,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까지 지속
- 건설CEO 71.6%, 해외시장 진출 계획 없어

■ 경제 동향

- 3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41.7% 급등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CEO 32.8%, 입·낙찰 및 적정공사비 정책 미흡¹⁾

-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 및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해 -

■ 주택·부동산 정책 ‘우수’ 응답, 대형사일수록 만족도 높아

- 건설산업이 현재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인 반면, ‘우수’는 10.4%에 그침. 이러한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정부 정책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한 반면, ‘우수’하다는 의견은 9%에 그침. 이는 공공공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됨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한 애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또한 29.9%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우수’하다는 응답은 6%에 그침.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별로 살펴보면 1~200위까지의 건설업체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20%대인 반면, 201~300위 건설업체는 41.7%를 차지해 하위 업체일수록 산업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반면,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22.4%가 ‘우수’하다고 응답해 ‘미흡’하다는 의견(16.4%)보다 다소 높았음. 특히 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45.5%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 업체일수록 현 정부의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계 최대 현안은 ‘적정공사비제도 개선’

-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2.24~4.20 기간에 건설CEO 100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유효응답 수는 67인이었음.

(52.2%)'을 선정함. 또한, '종합심사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37.3%)'도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한 이슈로 꼽혔으며,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23.9%)' 역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업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선정됨. '지역 중소기업체의 보호(23.9%)'도 건설업체 상생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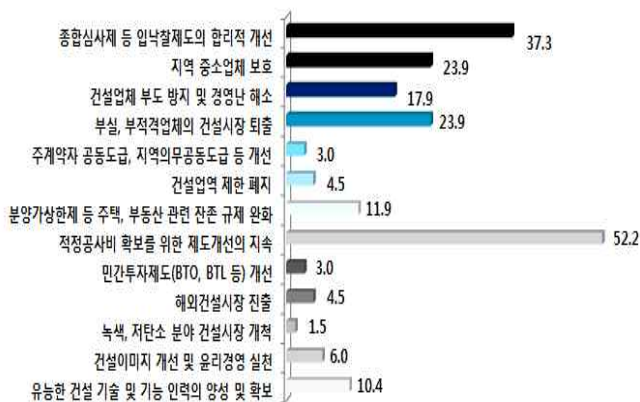
-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업체 최대 현안은 '각종 건설 관련 규제의 개선과 잔존 규제의 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산업 장기 비전 수립을 위해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 및 상생 발전' 필요

- 마지막으로 정부의 건설산업 장기 비전 수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58.2%가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함. 이는 앞서 '적정공사비 확보',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과도 관련되며, 건설업체들도 '건설공사의 제 값 주고 제 값 받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다음으로 55.2%가 '양극화 해소 및 상생 발전', 29.9%는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산업 방향 모색', 26.9%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라고 답해 건설업체 CEO들은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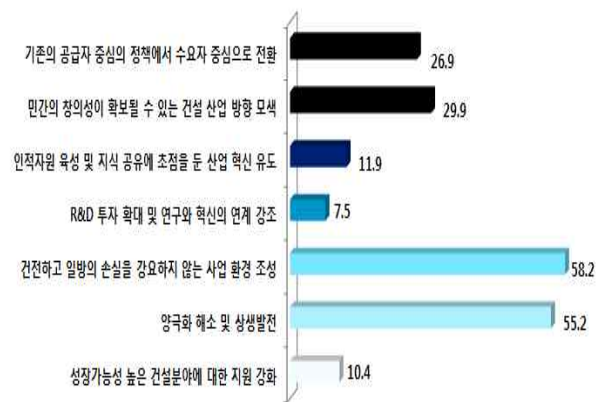
(N=67, 단위: %)



주 : 복수 응답

<정부가 장기비전 수립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N=67, 단위: %)



주 : 복수 응답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건설CEO 41.8%,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까지 지속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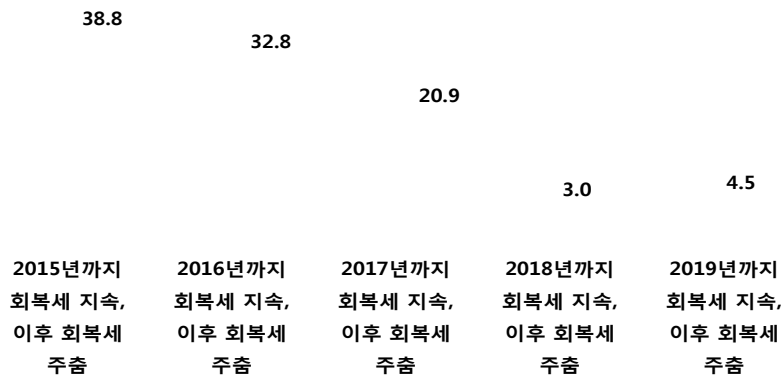
- 국내 건설시장도 향후 단기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국내 건설시장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주춤 38.8%

-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5년까지 회복세 지속 이후 회복세 주춤으로 응답한 비중이 38.8%를 기록해 가장 높았음.
-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8%, 2017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비중은 20.9%를 기록한 반면, 2018년, 2019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비중은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남.
- 결국 CEO들은 현재의 시장 회복세가 향후 3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 건설시장 회복 기간 전망>

(단위 : %)



■ 정부의 민자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 민자 건설시장 회복 전망 다소 우세

- 향후 5년 내 민자 건설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3%가 향후 2~3년 간 침체 지속 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했음.
- 2016년부터 회복세 시작으로 응답한 비중도 20.9%를 기록해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 긍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 단, 향후 5년 동안 침체 지속으로 응답한 비중도 34.3%를 기록해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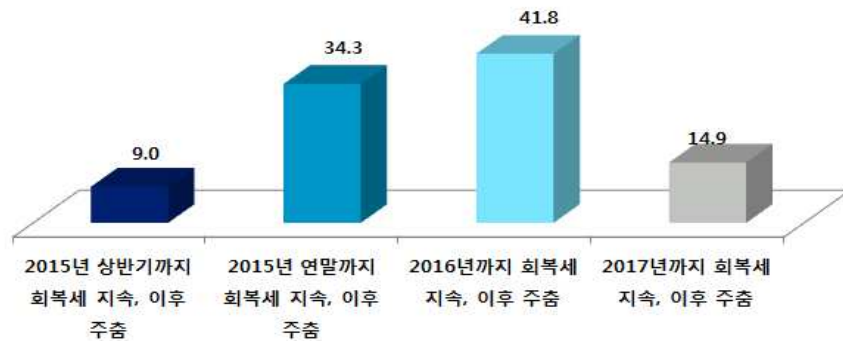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2.24~4.20 기간에 건설CEO 100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유효응답 수는 67인이었음.

■ 주택건설시장, 2016년까지 회복세 지속 전망이 우세

- 주택건설시장의 최근 회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향후 1~2년 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 2016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연말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비중도 34.3%를 기록함.
 - 반면, 2015년 상반기까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 비중은 9.0%에 불과
 - 결국 최근 주택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음. 단, 201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적 회복세에 대한 전망은 14.9%에 그침.

<향후 주택건설시장 회복세 전망>

(단위 : %)



■ 뉴스테이사업,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일부 관심

-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조사 결과, 10.4%가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사업 참여는 검토 중이지만 참여 여부는 미정이라는 응답은 22.4%를 기록했음.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그룹별로 살펴보면, 1~100위 사이 건설사 CEO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뉴스테이사업 참여 의향>

구분	응답 수	사업 참여 검토 안함	사업 참여 가능성 낮음	사업 참여 가능성 높음	사업 참여 검토 후 참여 여부 미정	계	
전체	67	49.3%	17.9%	10.4%	22.4%	100.0%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00위	18	27.8%	16.7%	22.2%	33.3%	100.0%
	101~200위	17	58.8%	5.9%	5.9%	29.4%	100.0%
	201~300위	12	58.3%	25.0%	8.3%	8.3%	100.0%
	300순위 초과	20	55.0%	25.0%	5.0%	15.0%	100.0%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건설CEO 71.6%, 해외시장 진출 계획 없어¹⁾

- 동남아시아 가장 선호, 북한 시장은 리스크 커 부담 -

■ 해외 건설시장 신규 진출 의향 14.9%, 2011년에 비해 절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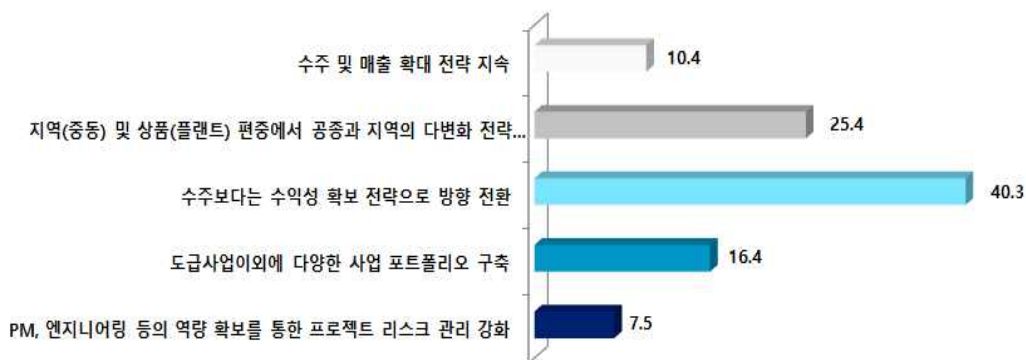
- 해외 건설시장 진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71.6%를 차지하였으며, 이미 진출한 경우는 13.4%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리스크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남아시아(45.5%)가 가장 먼저 진출하고 싶은 권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인도 및 중앙아시아(18.2%), 중동(9.1%) 순이었음.

■ 수익성 확보전략에 중점, 유망상품은 석유화학 플랜트

-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영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수주보다 수익성 확보가 4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종과 지역의 다변화(25.5%), 도급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16.4%)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음.
 - 대형 건설사 CEO의 경우 지역 및 공종 다변화와 수익성 확보 전략을 동등하게 강조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영전략 방향>

(단위 : %)



- 유망 상품으로는 석유화학 플랜트(25.4%)를 지목하였고, 다음으로 발전소(20.9%), 도로 및 교량(11.9%) 순이었음.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2.24~4.20 기간에 건설CEO 100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유효응답 수는 67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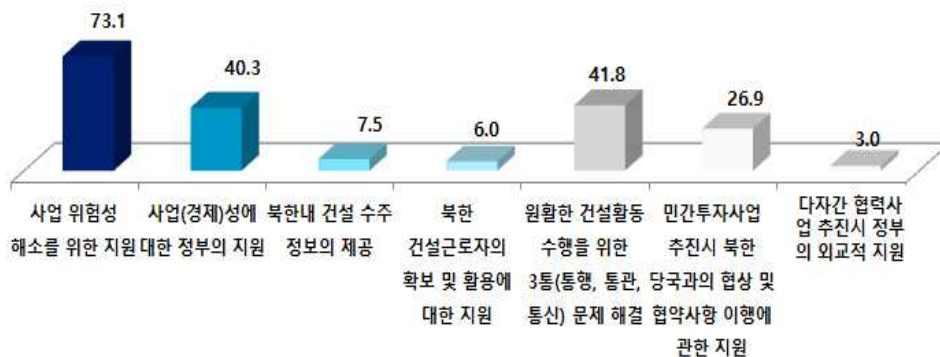
- 유망 상품의 1~3순위를 종합할 경우 신도시 개발, 도로 및 교량, 석유화학 플랜트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음.
- 해외 건설시장 진출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는 43.9%가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을 꼽았으며, 뒤를 이어 사업 창출능력과 시공능력이 각각 14.9%인 것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할 경우 협력체계 구축(현지화 등)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됨.

■ 북한 시장 진출, 리스크 해소 위한 정부 지원 절실

- 북한 건설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6%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출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53.7%로 조사됨. 다만, 1~100위 이내 기업 CEO의 경우 72.2%가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의 경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시장 진출시 유망 분야 1순위는 도로(56.7%)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도시 및 신도시 개발(9.0%), 발전소 및 송전시설(7.5%), 주택(7.5%) 순으로 집계됨.
 - 1~3순위를 종합하여 집계하면 도로의 선호도는 여전하였으나 다음 순위는 철도 및 전철, 발전소 및 송전시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 및 신도시 개발 순으로 바뀜.
- 정부의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 위험성 해소를 위한 지원(65.7%)과 원활한 건설활동을 위한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14.9%)을 강조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할 경우 사업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및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북한 시장 진출시 중요한 정부지원 1+2순위 종합>

(단위 : %)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3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41.7% 급등

- 공공 31.9% 증가해 5개월 만에 반등, 민간 196.1% 급등해 견조한 회복세 시현 -

■ 공공·민간 모두 호조,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경신

-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141.7% 급등한 11조 8,318억원을 기록함.
 - 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6년 이후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통상 5조~7조 원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4조~5조원 정도 높은 실적임.
 - 그동안 지연되었던 공공공사 발주가 이뤄진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토목과 건축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공공 부문 31.9% 증가, 5개월 만에 반등

- 공공수주는 모든 공종이 양호해 3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대치인 2조 1,402억원을 기록함. 결국, 전년 동월비 31.9% 증가하여 5개월 만에 반등함.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비 27.9% 증가해 5개월 만에 반등하였는데, 5년 내 최대치인 1조 4,497억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3월 실적으로는 6년 내 최대치인 3,252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비 52.2% 증가함.
 - 비주택 건축수주 또한, 전년 동월비 32.4% 증가한 3,653억원을 기록함.

<2015년 3월 건설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 3월	4,895.3	1,622.8	1,133.2	489.6	213.7	275.8	3,272.6	228.9	3,043.7	1,692.0	1,351.7
2015. 3월	11,831.8	2,140.2	1,449.7	690.5	325.2	365.3	9,691.6	945.6	8,746.0	7,123.3	1,622.7
증감률	141.7	31.9	27.9	41.1	52.2	32.4	196.1	313.1	187.4	321.0	20.0
2014. 1~3월	15,972.2	5,897.6	4,827.2	1,070.4	442.3	628.1	10,074.5	960.1	9,114.4	5,614.1	3,500.3
2015. 1~3월	24,419.0	4,576.4	3,430.5	1,145.9	406.0	739.9	19,842.6	2,269.5	17,573.1	13,064.7	4,508.4
증감률	52.9	-22.4	-28.9	7.0	-8.2	17.8	97.0	136.4	92.8	132.7	28.8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196.1% 급등, 주택수주 3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민간수주는 전년 동월비 196.1% 급등한 9조 6,916억원을 기록,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토목수주는 3월 실적으로는 3년 내 가장 양호한 9,45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비 313.1% 급등함.
 - 한편, 주택수주의 경우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7조 1,23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비 321.0% 급등함. 수도권 지역의 수주가 매우 양호한데,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비 20.0% 증가한 1조 6,227억원을 기록함.

■ 건축은 주택과 사무실 증가, 토목은 도로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 건축의 경우 공장 및 창고, 관공서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
 - 주택수주는 민간과 공공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비 290.9% 증가함.
 - 공장 및 창고, 관공서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7%, 21.3% 감소해 부진하였으나,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건축수주는 각각 48.5%, 675.7% 증가함.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및 교량 수주의 경우 금액 자체는 예년 수준이나, 지난해 3월 수주가 양호한 데 따른 반락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43.7% 감소함.
 - 한편, 철도 및 궤도 수주는 도시철도 물량 증가 및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비 1,021.7% 급등하였으며, 항만 및 공항, 토지조성도 각각 114.4%, 152.6% 증가함.
 -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도 민간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37.9%, 590.0% 급등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5. 3월	7,448.6	1,110.3	393.5	325.2	158.9	454.6	119.8	175.0	347.4	432.6	550.5
증감률	290.9	48.5	-11.7	-21.3	675.7	-43.7	1,021.7	114.4	152.6	1,237.9	590.0
2015. 1~3월	13,470.7	2,996.4	952.7	958.4	340.8	823.1	695.6	251.0	647.4	973.6	1,567.2
증감률	122.4	37.0	18.9	-3.4	129.0	-65.8	-48.5	41.0	42.3	234.8	193.4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12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와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이행 능력평가 개선방안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5. 14	기획재정부	• 국고국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발주기관 대상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중간점검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유위성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공중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복합공사란 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 「건설산업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상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복합공사를 도급할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했다더라도 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당 평균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당 0.6명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 • 전문건설업체에서 1~2개 전문면허 추가 취득을 통하여 복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업 면허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 면허자에게 종합건설업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업역의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 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5. 5. 19(화) 15:00~17:40
- 장소 :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주택협회
- 주제 발표
 - 제1주제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발제자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제2주제 : 주택임대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방안
(발제자 : 이상영 명지대 교수)

해외건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해야

해외건설은 최근 3년 간 평균 6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기록을 달성하는 등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 국내 건설사들이 큰 손실을 경험하면서 산업 차원의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산업 및 기업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항로를 이탈할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하다. 선제적 알람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 기반의 총체적 모니터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해외건설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 Timetric, BMI 등이 진출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 단계의 타당성 검토에 활용되고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잠재리스크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건설사업의 진행률에는 진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반영하는 외적 요인과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내적 요인이 반영되는데 부정적 내외적 요인이 발생하면 계획 진행률을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이탈 정도를 계량화하면 수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의 잠재리스크 규모를 산업 및 기업 차원에서 지수화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최근 5년 간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의 1건당 평균 규모가 과거에 비해 약 6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프로젝트관리와 리스크관리 역량도 이 만큼 향상되었는지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중국, 인도 등의 기술경쟁력 상승, 국내 건설시장의 지속적 정체, 유가 하락폭 증가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부담도 증폭되고 있다. 단위 사업의 수익성 제고는 결국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작이다. 수익성 제고는 사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해외건설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선 다음의 3가지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인력 운영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리스크관리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리스크관리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아무리 좋은 체계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행 및 운영 주체인 실무진과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부족하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리스크 대응 및 통제에 대해 책임과 역할을 분리하여 실무진이 적극적이고 투명한 리스크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환경 구축과 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아투데이, 2015. 5. 8>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